

##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근원적 대책은 안전 역량 자체를 키워주는 것입니다.

### 1. 주요 기사 내용

- 1.27.(토) 노컷뉴스, “중처법 전면시행...‘유예 압박’ 빼곤 대책 없던 노동부의 지난 한 달”

### 2. 설명 내용

-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와 관련하여, 중소기업의 안전 역량을 향상시켜 중대재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‘예방’하는 것이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라는 기조 하에서,
  - 모든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중소기업의 안전역량 제고에 중심을 두고 추진 중이며, 특히,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하는 데 전(全)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
- 첫째, 현(現) 정부는 ‘중대재해 감축과 예방’을 고용노동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로 삼고, 지난 ‘22.11.30. 「중대재해 감축 로드맵」 마련·발표하면서,
  - 그간의 처벌·규제 중심 정책에서 ‘자기규율 예방체계’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,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 지원·관리해옴
- 둘째, ‘자기규율 예방체계’의 핵심인 위험성평가도 중소기업이 실제 할 수 있도록 ‘쉽고 간편’하게 전면 개편(‘23.5월)하였음
  - 이를 위해,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「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」 도 발간·배포(‘23.6월)하고, 확산 중임
  - 또한, 우수 사례 중심 교육, 특화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중소 사업장을 타깃으로 실효적 위험성평가를 집중 지도·지원 하였음